



산업정책 [www.kcca.or.kr](http://www.kcca.or.kr)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大·中企협력재단 상생 방안 추진
- 기업銀, 중계무역 등에 금융지원
-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 착수
- 불량품 납품업체 제재 강화
- 가짜 중소기업에 과태료 부과
- 중기청, 수출 中企 제품 디자인 지원
- 하반기 정책자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 中企 정책자금, '사회적 기업' 우선 지원
- 수출유망 中企 해외전시회 3년간 지원
- 한국-중국, 경제정책 경험 공유·기업간 교류 확대키로
- 찾아가는 경영애로상담 창업초기기업들에 인기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돼 육·해·공 통합 전국 대중교통 경로정보 및 환승정보가 제공된다. 또 '내손안의 정보'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으로 정보제공 매체를 다양화하고 정부주도의 교통정보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이동통신사, 포털사 등 민간 교통정보사업자와 제휴해 교통정보 제공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 02-2110-6018)

### ◇ 인천공항 인터넷 탑승수속

- 인천공항 국제선 승객은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탑승수속을 마치면 공항에서 빠르게 출국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의 :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02-2110-6467)

### ◇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 장거리 심야운전 등으로 근로여건이 미흡한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복지사업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먼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등학생은 1200명에게 50만원, 대학생은 1400명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화물운송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화물차 운전자의 유가족에게 보상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문의 :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10-6360)

### ◇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확대

- 가정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 절감량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현금, 상품권, 캐쉬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가 확대 운영된다. 올해 하반기까지 약 200만 세대, 내년에는 300만 세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02-2110-7932)

### ◇ 음식물쓰레기 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

-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가 시작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14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012년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2110-6942)

###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 11월 26일부터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9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유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아울러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도 인증 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정책총괄과 02-2110-6686)

### ◇ 겨울철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가 폐지된다. 입장객 증가에 따른 시설물 확충 및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4211)

## ◇ 타임오프제 시행

- 7월부터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에 따라 노사 간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와 인원 범위 내에서 유급처리가 허용된다.

(문의 :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  
02-6902-8232)

## ◇ 노동부 명칭 고용노동부로 변경

- 노동부 명칭이 7월 5일자로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 출범을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고용정책으로 추진 방향이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일자리가 있는 사람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재설계할 계획이다.

(문의 : 노동부 홍보기획팀 02-2110-7103)

## ◇ 대졸자 취업지원을 위한 Job-Young Plaza 운영

- 7월부터 서울 및 서울서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전문 취업 컨설턴트가 대졸자 등 청년층에게 1:1 취업상담과 취업 알선을 해주는 잡영 플라자(Job-Young Plaza)가 운영된다. 심층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컨설턴트 1인당 하루 10여명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올해 중 대졸자 2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6902-8448)

## ◇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조업에 대한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9월부터 상조업을 할부 거래업으로 규정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사업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는 계약 2주 안에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계약해제시 영업 3일 이내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02-2023-4340)

## ◇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 활성화

-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별, 업무별,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가 도입된다. 유연근무제는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자율복장제, 재택근무제 등의 형태로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복무과 02-2100-3318)

## ◇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 하도급 거래에서 구두 위탁 관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계약서를 못 받아도 계약 내용을 원사업자(대기업)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해 15일 안에 답이 없으면 당초 확인한 대로 계약이 인정된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 ◇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

- 6월 13일부터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

되는 금융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과 불건전한 현금유통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및 부금 등이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과  
02-2156-9853)

◇ 꺾기 등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과태료 부과

- 11월부터 은행이 대출자에게 예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꺾기에 나서다 적발될 경우 은행은 5,000만원, 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은행이 예금·대출을 광고할 때는 반드시 이자율 범위와 산정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4)

◇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시행

-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7월 1일부터 시행돼 은행빚을 갚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나 자산관리공사 한마음금융 등 신용회복지원 기관에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할 경우 기관은 고용지원센터 구인정보 등을 활용해 채용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채용기업에 1인당 최고 54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과  
02-2156-9471)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강화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다른 금융권과 같이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현황 및 자산·부채구조 변경을 위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최초 1년간 70%

이상, 2년차 80% 이상, 3년차부터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과  
02-2156-9852)

◇ 범죄피해구조금제도 개선

- 8월부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개선된다. 피해자의 사망 혹은 장애, 상해 당시의 실질소득에 비례해 구조금을 산정하며 지급신청 기간은 범죄 피해 발생을 인지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문의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263)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8월부터 특수임무수행자도 다른 국가보훈 대상자와 같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가 면제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984~6)

◇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 11월 15일부터 장기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체류기간 내 일시 출국 기간이 1년 이하인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500-9067)

## 大·中企협력재단 상생 방안 추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최근 경제계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재단은 상생문화포럼을 열어 주요 대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생협력 모델을 분석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내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1차 협력사에서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임치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에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원청업체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재단은 자료 보관 장소인 임치금고를 현행 400개에서 내년 초까지 3천개로 늘린다.

재단 이사장인 정준양 포스코 회장도 실효성 있는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하반기 재단 활동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상생이라는 화두를 놓고 자기 주장만 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업銀, 중계무역 등에 금융지원

기업은행은 우량 수출중소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맺고 무역금융지원이 제한된 특수수출거래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수수출거래는 수출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외국 인도수출 등으로, 매년 증가세에도 무역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수출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보증비율 100%)를 활용해 특수수출거래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 및 관련 결제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고객에게는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우대하기로 했다.

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은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한도는 수출실적 등을 반영해 기업 1곳당 30억원 안에서 운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천만불 이상 수출강소기업을 향후 5년 동안 500개 육성하기로 하는 한편 수출기업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수출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수출증대만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국가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 착수

정부 지원금 등을 노리고 중소기업체로 위장하는 사례를 찾아내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위장 중소기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를 수집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 중소기업'이 중소 상공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각종 지원금을 타내거나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신고 대상은 서류 등을 허위로 만들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들이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혜택을 받으려면 매출액이나 상시 근로자 수, 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고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런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당국을 속이면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엉뚱한 업체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소기업계뿐 아니라 정부도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사례가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실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접수한 신고 사례를 토대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 02-2124-3241)

## 불량품 납품업체 제재 강화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규정을 고쳐 불량품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품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횡수에 따라 경고부터 최대 6개월까지 종합쇼핑몰내 거래를 정지했던 것을 최저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거래정지 기간을 확대했다.

또 납품검사를 통과했다더라도 수시 품질점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최대 6개월까지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종전까지는 납품검사 통과 후에 불량품으로 확인되더라도 별다른 제재없이 다른 제품을 납품하면 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1년이내일 경우 하자보수보증을 면제하던 것을 필요하면 하자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공 수요물자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가짜 중소기업에 과태료 부과

각종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중소기업 행세를 하는 가짜 중소기업에는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입법예고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 이 같은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기업인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이 가짜 중소기업을 단속하려는 이유는 우리 경제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원 사업이 대폭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1천500여개에 달한다. 중소기업은 과태료 조항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 중기청, 수출 中企 제품 디자인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 및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김현태)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제품경쟁력은 있으나 디자인이 취약한 초보 수출기업제품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선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09년부터 수출중소기업 500프로그램 선정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 수출중소기업 500프로그램

- 기술성·사업성을 보유한 100만불이하 유망 수출기업을 심층시장조사, 규격인증, 전시회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5년내 500만불이상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 연도별 육성목표:  
( '09)100개사 → ( '10)200개사 → ( '11)350개사  
→ ( '12)500개사

'09년에는 완제품 위주 42개사를 대상으로 디자인(업체당 평균 30백만원)개발을 지원한 결과

\* 시장조사 및 문제점 분석 → 디자인컨셉도출 → 도면작성 → 모형 제작

현재 제품양산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개발모형만으로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 선주문이 들어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관세청통관기준)이 전년도 전체실적의 70%에 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09년 지원기업(42개사)의 수출실적(백만불): '08(14.2) → '09(15.3) → '10.6(10.7)

김유숙 해외시장과장은 “후발개도국의 맹추 격속에 품질 및 기술과 함께 디자인 경쟁력이 개도국과의 차별화된 수출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올해는 제품디자인뿐 아니라 UI(User Interface, 작동기기) 및 케이스까지 지원분야를 확대하여 상품성을 높일 계획으로

\* '10년 지원예산은 980백만원으로 업체당 지원한도 45백만원(정부지원비율 70%)

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트렌드 교육을 실시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디자인의 중요도 및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문의 : 해외시장과 강봉수 042-481-4424)

## 하반기 정책자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은 남북교역 중단조치(5.24일), 대기업 구조조정 발표 6.25일에 따른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목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생명·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평가

모형'이 개발되고, 녹색관련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와 함께 정책자금 신용대출시 연대입보 면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자금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남북교역 중단조치(5.24일)에 따른 「對北 투자 모기업 및 임가공 교역업체」, 채권은행의 65개사 구조조정대상 발표(6.25일)에 따른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 6월 21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수정 공고(6.21일)하여, 상기 2개 기업군을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에 포함시켰다.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이 「既용자된 정책자금의 상환유예1」를 신청할 경우에는 1년 6개월간 유예하고,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2)을 투입하여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1. 기존 융자금의 만기(5~8년)는 유지한 상태에서 원금의 상환을 18개월간 연기

- 對北투자 모기업 및 임가공 교역업체 정책자금 지원(5월말 현재) : 55개사 349억원

-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현황 : 금융위원회의 협조로, 채권은행에서 파악중

2. 융자조건 : (금리)4.2~5.7%, (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한도) 10억원 이내

둘째, 영리법인 형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목



표제」가 도입된다. 금년중 5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내년도에는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 최근 3년('07~'09)간 지원 실적 : 1개 업체, 2억원

2. 비영리법인인 제외(미국, 캐나다, EU에서도 비영리법인인 정책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

셋째, 신성장 유망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6월에 영상·게임·캐릭터 산업을 평가하는 「문화콘텐츠 평가모형」이 개발되었고, 10월말 까지 「생명·바이오 평가모형」이 추가로 개발될 계획이다.

넷째, 지식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그간 업력에 관계 없이 신성장기반자금(지식서비스업자금 1,400억원 별도운용)을 신청토록 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업력 7년 미만기업의 경우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되었다.

\* 업계 간담회에서 저금리인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兩자금간의 금리차이 : 0.37%p)

또한 우수 Green-Biz선정, 녹색기술인증 등 녹색 관련 인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우대지원\*된다.

\* 우대사항 : ① 시설자금의 융자잔액한도(수도권 45, 지방 50억원) 예외, ② 시설자금 사정한도 확대(소요자금의 80% → 100%), ③ 시운전자금 지원확대(시설자금의 30% 이내 → 50% 이내)

다섯째, 정책자금 신용대출시 연대입보 면제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9월 이후,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진공 기업평가등급 'B' 등급 이상이고 5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인 경우, 중진공 지역본부장의 재량으로 연대입보 면제를 할 수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5개사)함에 따라

'B' 등급 이상이고 5억원 이하 융자시 연대입보를 전면 면제하고, 5억원 이상 융자시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연대입보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7월중에 시행하게 된다.

\* 연대입보 면제대상 : (법인기업) 대표이사, 실질적 경영주, (개인기업)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

(문의 : 기업금융과 이장훈주무관 042-481-4375)

## 중소 정책자금, '사회적 기업' 우선 지원

“연말까지 50억원 지원, 내년도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 지원제도로 사업초기 담보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정영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영

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5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임(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예시)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

\* '10.7월말 기준 353개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고용노동부가 인증)되었으며, 1,500여개 업체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 중에 있음

한편, 중진공은 지난 7월 20일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현태 중진공 기업금융사업처장은 “앞으로 사회적기업에게 종합진단 및 연수 등을 접목시켜 해당 기업의 강약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및 종업원 능력 향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 내년에는 지원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자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은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

(<http://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기업 소재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 수출유망 中企 해외전시회 3년간 지원

해외전시회 주관단체(전문업종의 조합·협회 등)들이 동일 전시회에 3년 연속 지원받을 기회를 가지므로써 주요타깃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유망전시회 지원사업의 지원기간(2년), 지원업체 수 제한 등으로 전시회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유망전시회 운영방식을 개편하고, 유망전시회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여를 통한 수출성과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글로벌 유망전시회 : 매년 해외전시회를 선정·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전시회 장기 파견계획 수립이 곤란하여 성과제고에 한계가 있어, '08년도에 유망전시회를 신규 지정(50개)하여 2년('09~'10) 연속 지원

그동안 유망전시회는 일반전시회와의 지원 여건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09년도 실시한 유망전시회의 수출성과가 일반전시회에 비하여 월등한 실적을 보임에 따라 유망전시회에 대한 지원횟수 및 예산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09년 해외전시회 추진실적

구분	횟수	지원금액	계약실적	금액대비 실적배수
유망	42	4,925,437천원	711,678천불	166배
일반	94	7,746,728천원	483,072천불	71배
전체	136	12,672,165천원	1,194,750천불	108배

올해 선정되는 글로벌 유망전시회의 경우,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3년간 연속 지원함으로써 사전 준비는 물론, 장기계약을 통한 유리한 부스위치 확보 등 전시회 참여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함께,

\* (현행) 2년 연속 지원 → (개선) 3년 연속 지원

지원예산 확대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유망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지원한다.

\* (현행) 10~15개사/1회 → (개선) 20~30개사/1회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김유숙과장은 “향후 수출 유망전시회를 정부지원 해외전시회 사업의 롤 모델(Roll Model)로 삼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하면서, 많은 주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사전시장조사비용이나 공동홍보관 확대 등 일 반전시회와 차별화

글로벌 유망전시회로 선정받기 위한 절차 및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65) 및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02-2124-3227/9)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문의 : 해외시장과 과장 : 김유숙 042-481-4464, 사무관 : 이영석 042-481-4465)

## 한국-중국, 경제정책 경험 공유 · 기업간 교류 확대키로

한국과 중국이 경제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기업간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 G20 등 글로벌 포럼에서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은 23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제9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의 거시경제동향과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거시경제정책을 적시에 마련했으며 양국 경제 모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에도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외 불안요인이 존재하므로 향후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윤 장관은 양국의 지속성장을 위해 양국간 경제 정책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정책은 물론 에너지, 환경보호 등 지속성장, 지역균형발전 등 공통 관심을 갖는 미래 정책과제에 대해 정부기관간 및 연구기관간 협의채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LCD, 에틸렌 프로젝트 등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건에 대한 중국측의 협조와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에서도 양 부처내 부문별 협력과 연구기관간 협의채널을 강화하고 한국기업의 진출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세계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경기회복 불균형, 재정위기 등 구조적 리스크로 인해 세계경제의 완전한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또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 G20 등 글로벌 포럼에서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 이슈 등에 대한 중국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밖에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분야에서 기업간 투자 등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간 호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차기 한중경제장관회의는 2011년 중 양국이 합의하는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02-2150-7675)

### 찾아가는 경영애로상담 창업초기기업들에 인기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 7.15(목) 오후2시, 배화여자대학 창업보육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찾아가는 중소기업 소통마당”을 개최했다.

찾아가는 중소기업 소통마당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창업초기기업 또는 경영상의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1:1 맞춤형으로 기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로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사업은 시작했으나 사업역량강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는 기업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이다.

창업초기기업들이 주로 궁금해 하거나 어려워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기업사업주에게 중요한 노무관리 포인트 부분이 가장 어려워 하는 애로사항이었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처리 및 관리방법, 재무제표와 회사의 실질적인 비용 반영구조,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과 벤처기업인증의 필요성 및 준비사항, 특허출원의 필요성 및 가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찾아가는 중소기업 소통마당”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서울중기청 창업성장지원과(편선영 02-509-6723)로 문의하면 된다.